

“국민행복만 생각하겠습니다.

희망 대한민국, 함께 열겠습니다.”

# 2015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 계획

2015. 1. 22.

교육부    문화체육관광부    보건복지부  
환경부    고용노동부    여성가족부

## II. 맞춤형 복지 및 일·가정 양립

### 1 기본방향 및 목적

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

맞춤형 복지 구현			일·가정 양립 실현	
① 사회안전망 확충	② 건강한 삶 보장	③ 노후생활 안정	④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	⑤ 가족친화문화 확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</li> <li>·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</li> <li>· 복지재정 관리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편의 제고</li> <li>·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</li> <li>· 보건의료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활기찬 노년</li> <li>· 노후소득 보장</li> <li>·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강화</li> <li>·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</li> <li>· 여성인재 양성 및 양성평등 기반 조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</li> <li>·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</li> <li>· 가족가치 확산</li> </ul>

- 소득계층·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행복도를 제고하고,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 향상
  -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,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, 노후생활 안정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 구현
-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현될 수 있는 직장문화 및 사회 환경조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, 가족친화문화 확산
  -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 실천, 일터·가정에서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

## 1 성과

## □ 복지혜택 확대 및 가계 실질소득 증가

- **복지예산 확충,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**(‘14.8월), **복지3법 제·개정**(‘14.12월) 등을 통해 **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보장**을 위한 **기반 구축**

※ 복지예산 : (‘12) 92.6조 → (‘14) 106.4조원, 2년간 15% 증가  
 ※ 복지 3법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·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정

- 4대 중증질환(‘13.6월), 3대 비급여(‘14.2월) 분야 **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, 기초연금 도입·시행**(‘14.7월)으로 **노후생활안정** 지원

※ 4대 중증질환, 선택진료비·상급병실료 부담: (‘12) 3.6조→(‘14) 2.5조원, 32% 경감  
 ※ 노인이전소득 : (‘13.3분기) 66.6만원→(‘14.3분기) 74.7만원, 12% 증가

## □ 일·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-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등으로 **여성고용률 상승**

※ 여성고용률 : (‘12) 53.5% → (‘14) 54.9%

- **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**

※ 가족친화인증기업 : (‘12) 253개 → (‘14) 956개  
 ※ 영유아 시설 이용률 : (‘12) 63.7% → (‘14) 66.7%

## 2 한계

- 복지사업·재정의 증가에 비해 **정책체감도는 낮은 수준**,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**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**

※ (저출산·고령화 대응) 초저출산 지속, 인구구조 급변, 노후준비 부족 등  
 ※ (사회안전망) 탄력적 운영 미흡, 일부 사각지대, 현장복지 지역 간 차이  
 ※ (의료·건강) 질병예방·건강생활실천 미흡, 의료비 부담 등  
 ※ (양성평등 정착) 직장-가정 양립이 어려운 관행, 여성의 경력단절 상층

## 1 사회안전망 확충

성과지표	2014	2015	2016	2017
수급자 평균급여	42.3만원	47.2만원	49.3만원	51.3만원
사각지대 발굴 수	40만명	45만명	50만명	55만명
민간지원 연계 건수	470만건	540만건	590만건	650만건

## 【1】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

## □ 기초생활 보장의 맞춤형 급여 개편

-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(‘15.7.20 첫 지급)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(‘15.3월), 인력배치·교육(‘15.3~5월), 전산시스템 구축(‘15.6월) 등 철저한 준비

## &lt; 제도개편 내용 &gt;

- **급여기준 개선**: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 지원 ⇒ **중위소득 기준** 급여별 다층화
  - \* 생계(복지부): 중위소득 30%, **의료(복지부): 중위소득 40%**,  
주거(국토부): 중위소득 43%, **교육(교육부): 중위소득 50%까지**
- **지원수준 확대**: 수급자 수 134만명→210만명, 평균급여액 42.3만원→47.2만원
  - \*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로 반영,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

## □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호 강화

- **(장애인 활동지원) 장애 3급까지 장애급여 제공 대상 확대**

※ 수혜인원: (‘14) 53,400명(1-2급) → (‘15 예상) 56,000명(1-3급)으로 2,600명 증가

- **(독거노인·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) 가구 내에 화재·가스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안전정보 전송, 응급상황시 소방서 출동**

※ (‘14) 8.3만명 → (‘15) 9.6만명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

- **(학대아동)** 아동보호전문시설을 확충하여 **즉시보호 강화**, 학대 발생 가정 모니터링·심리치료 등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증원
  - ※ 아동보호전문시설: ('14) 50개소 → ('15) 56개소로 확충
  - ※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: ('14) 450명 → ('15) 840명(심리치료전문가 기관별 2명 포함) 학대피해아동쉼터: ('14) 72명 → ('15) 232명(심리치료전문가 기관별 1명 포함)으로 증원
- **(위기청소년)** 보호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동반자 확충
  - ※ 쉼터: ('14) 109개소 → ('15) 119개소, 청소년동반자: ('14) 1,000명 → ('15) 1,044명
  -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출, 자살, 학교밖 청소년, 일탈 및 비행 등 위기 유형별 예측모형 및 선제적 위기대응 서비스 모델 개발
- **(결혼이민자)** 정착을 위한 **종합지원 패키지 보급** 및 **취업지원 강화**
  - ※ 다문화가족지원센터·출입국관리사무소·교육청·고용센터 등 연계매뉴얼 배포, 집중 거주지역 고용센터·새일센터에 취업지원 전담인력 배치
  - **위기노출** 결혼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상담인력 대상 **인권보호·폭력대응** 교육 확대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**쉼터 증설**
    - ※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(보호시설) 증설: ('14) 24개소 → ('15) 25개소
- **(다문화가정 자녀)** 중도입국 학생 등의 **초기적응 지원** 및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**다문화예비학교, 레인보우스쿨 확대**
  - ※ 다문화예비학교: ('14) 80교 → ('15) 100교
  - ※ 레인보우스쿨: ('14) 7개 시·도 12개 기관 → ('15) 12개 시·도 17개 기관
- **(한부모) 아동양육비를 인상** 하고('14, 연 84만원 → '15, 연 120만원), 미혼 한부모가 실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강화
  - ※ 부양의무자와 갈등·관계단절 상황에 있는 미혼 한부모에 대해 지방생활 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부양거부·기피 사례 인정

- **(일본군위안부 피해자) 생활지원 확대** 및 **국제적 공감대 확산**
  - ※ 피해자 생활·정서지원 등 맞춤형 지원 확대,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 및 정부백서 발간('15.12월)
- **(농어촌·도서벽지) 주거환경과 생활 개선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**
  - ※ 공동이용시설: ('15) 71개소(공동생활홈 35, 공동급식시설 20, 작은목욕탕 16)
  - ※ 돌봄시설: ('15) 22개소(공동아이돌봄센터·이동식 놀이교실 7, 주말돌봄방 15)

#### □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

- **(처벌 강화)** 아동학대 발생 즉시 해당시설 **폐쇄** 및 학대행위자 자격정지 근거를 마련하고 학대 교사·원장 **영구퇴출**
  - 신고포상금 강화 등 아동학대 **신고 활성화**, 어린이집 아동학대 **특별점검** 추진(경찰청 협조)
- **(CCTV 의무화)** 모든 어린이집에 **CCTV 설치를 의무화**하고 부모의 **CCTV 영상 열람권** 제도화, 정보공시 강화(학대예방교육, CCTV 설치 등)
- **(부모참여 활성화) 평가인증** 부모참여를 강화하고 지표에 아동학대 예방 항목 확대 및 아동학대 **안전인증제 도입**
  -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**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보급**
- **(교사자격 강화)** 보육교사 양성체계(3급 과정, 사이버·학점은행 등)를 강화하고, **인·적성 검사 의무화** 및 근무환경 개선\*
  - ※ 보조교사 확충, 정시·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

## 【2】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

### □ 현장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

- '복지로' 포털(도움신청·채팅상담) - 129콜센터(상담내역) - 행복e음(보유 정보) 연계 및 활성화
  - ※ '복지로' 포털에서 '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' 간편검색 및 바로 신청, 본인 또는 이웃의 사연 신청 및 온라인상담 기능 제공
- 읍면동 민관협의체(8만명)·복지통(이)장(9.4만명)·좋은 이웃들(2만명) 등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전국 확대를 통한 복지수요자 발굴
- 기초수급탈락자, 공공기관 보유 잠재 위기 정보 등을 분석·활용하는 "사각지대 관리시스템" 구축으로 잠재 위기가구 주기적 모니터링
  - ※ 단전·단수·단가스 가구, 위기학생, 건보료 체납 가구 등

### □ 필요한 도움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이용편의 제고

- (복지서비스-일자리 연계) 고용복지+센터를 속도감 있게 확산하고('14, 10개소→'15, 31개소) 일자리·창업·금융·사회서비스 등 통합제공
  - ※ 매년 5개소 신설, 15개소 전환 추진, 장기적으로는 모든 센터 전환 목표
  - 일모아·워크넷-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, 대국민 고용·복지포털 구축 등 고용-복지 온라인 서비스 체계 마련
  -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장려세제(EITC)를 적용('15년,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)하여 수급자 탈빈곤 지원 및 근로유인 제고
- (긴급복지) 일시적 위기에 대한 긴급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('14, 약 8.4만건→'15, 15.6만건), 지자체 현장의 긴급지원 결정 재량 확대
  - ※ 위기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규정, 신속지원 필요시 담당공무원 우선지원 등
- (에너지바우처) 취약계층 98만 가구(중위소득 40% 이하 노인·아동·장애인 가구)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(총 10만원 내외) 지원('15.12월~)

- (민간자원 연계)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('15.7월) 및 기부연금(나눔기본법 제정) 도입, 공동모금회·종교단체·지역기업 등 다양한 복지자원 연계
  - ※ 기부금 : ('14) 12.9조원 → ('15) 13.5조원
- (사회서비스 단일카드통합) 이용자가 서비스 별 카드를 발급·소지하는 불편 해소 위해 바우처카드 단계적 통합(국민행복카드 도입)
  - ※ 아이행복카드(보육료·유아학비 지원, '15.1월)→고운맘·맘편한카드('15.4월)→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('15.7월)→기저귀·조제분유 구매지원('15.10월)→아이돌봄('16.1월)

## 【3】 복지재정 관리 강화

### □ 복지재정 누수 방지

- '복지로' 포털에 부적정수급 사례에 대한 익명신고 신설, 신고포상 확대 등으로 국민신고 상설화('14.11월~)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정누수 원천 차단
  - ※ 사망의심자 확인기관 확대(13→17개), 지자체 확인조사 주기 단축(6월→월/분기)
- 복지조사 전담조직 가동, 소득·재산 확인조사(연2회), 전자바우처·의료급여 등 현지조사 실시
  - ※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정부-지자체 합동 현지점검(연3회) 등
- 불법 사무장병원, 허위부당청구 의심병원 등 조사확대 추진

### □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유사·중복 사업 종합 정비

- 중앙부처(360개) 및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유사중복사업 정비
  - ※ 사업 통폐합, 전달체계 통합, 서비스 연계 등
-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안 마련('15. 상반기), 중앙 사업은 '16년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 사업은 평가·지원 연계

## 2 건강안 삶 보장

성 과 지 표	2014	2015	2016	2017
4대 중증·3대 비급여 의료비 경감 (누적)	1.1조원	1.8조원	2.4조원	2.6조원
결핵 발생률 (10만명당 발생건수)	88명	80명	73명	66명
성인남성흡연율	42.1%	37.0%	35.0%	33.0%
해외환자 유치 수	25만명	32만명	40만명	50만명

### 1 국민 의료부담 경감 및 접근성 제고

#### □ 4대 중증·3대 비급여 개선 등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

- (4대 중증)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의료비 경감(84.8%↓)
  - ※ 고가항암제(폐암·대장암 치료제), 고비용 치료법(방사선치료, 로봇 수술 등) 첨단 필수검사(암환자 유전자검사 등) 등 203항목 급여 확대
- (3대 비급여) 선택진료, 상급병실료, 간병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
  - 선택의사 비율 축소(80→65%), 원치 않는 이용에 따른 부담 완화('15.8월)
    - ※ 선택진료비 부담 ('12) 1조 4,365억→ ('15) 6,930억원, 52% 감소(누적)
  -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, 상위 5개 병원의 경우 62%에 불과한 일반병상 비율을 70%까지 확대('15.9월)
    - ※ 상급병실료 부담 ('12) 1조 1,772억→ ('15) 9,380억원, 21% 감소(누적)
  - 지방·중소병원 중심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적용 추진('15.1월)
    - ※ 간병비 개인당 부담 ('12) 56만원(7일 기준) → ('15) 3.9만원으로 경감

#### □ 생애주기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('14~'18) 수립·시행

- (임신·출산기) 의료비 걱정 없이 임신·출산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('15, '16),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('16, '18)
  - ※ 고령·조기진통 등 고위험 산모 부담 경감(20→10%), 임신성 당뇨검사 보험적용 등
  - ※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 중 초음파검사 치료재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

- (아동·청소년) A형 간염 무료접종 시행(12~36개월 대상, 90만명, '15.5월) 및 소아당뇨 지원('15년), 충치예방과 초기치료지원('17~'18년) 등
- (청장년기) 금연치료('15년), 고혈압·당뇨 등 만성질환자 통합치료 체계 구축('15.하), 고도비만 및 정신질환 치료('16~'18년) 등
- (노년기) 호스피스 완화의료('15.하)\*, 치매검사·치료 및 65세 이상 임플란트('16~'18) 등
  - ※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선택진료비, 1인실(임종시), 간병비 등 주요 비급여비용과 환자·가족 심리상담 등도 포함하여 건강보험 적용

#### □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

- (결핵퇴치) 환자(3.6만명) 집중관리 및 잠복결핵검진 확대
  - 청소년 잠복결핵 검진·교육(고1, 59만명) 및 의료비 지원('15.7월), 분만 의료기관·조리원 등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확대(법 개정 추진, '15.12월)
- (중증의상) 중급응급환자 권역 응급센터 확대('15.9월, 20→ 41개소), 중증의상센터 확충(12→ 14개소) 및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
- (감염 및 안전) 성형수술 환자 안전\* 및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를 강화하고,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수가 마련·지원('15.8월)
  - ※ 수술실 내 환자안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술실 제도개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 응급장비 구축, 미용성형광고 규제 등

#### □ 원격의료·원격협진 활성화 통한 국민편의 증진

-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본격 확산, 제도화 추진
  - 시범수가·인력 등 지원,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('14, 9개소→ '15, 50개소)
    - ※ '14년말 수가 발표 이후 추가 참여로 '15.1월 20개 기관 참여중, 30개소 추가 모집 예정
  - 오벽지 주민 대상으로 마을회관·경로당·방문간호 등을 활용한 다양한 원격의료 모형 개발·적용('15.4월~)

- **부처 간 협업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원격의료서비스 확산**
  - (군장병) 격오지 군부대(전방 GP 등) 원격의료 및 후방부대 장병 대상 원격건강관리 시범사업 대폭 확대
    - ※ (원격진료) 경증질환 중심 진료·상담실시, 응급후송 또는 대면진료 필요여부 등 판단
    - ※ (원격건강관리) 자가측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인별 식이요법 및 운동 처방, 스트레스 관리, 금주·금연 등 건강상담/관리 및 사후평가 실시
  - (원양선원) 위성통신을 이용한 원양선박·병원간 원격진료 및 건강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(5척, '15.3월)
    - ※ 전화(화상)을 통해 경증질환(소화기, 피부) 진료(선박 내 구비된 의약품 사용지도 등), 혈압·혈당·심전도 등 측정하여 위성통신으로 송출된 정보를 병원에서 분석·피드백
  - (교정시설) 원격진료 단계적 확대(27개→29개 기관으로 확대, '15년 하반기)
- **의료인 간 원격협진 활성화**
  - (응급협진) 대도시 거점병원 전문의 -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의사 간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('15.4월~, 5개 지역)
  - (의뢰·회송 환자 협진) 상급병원 - 병·의원간 의뢰·회송환자 대상 협력진료 시범사업 실시('15.4월~)
    - ※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 응급협진, 협력진료 등에 건강보험 적용

## 【2】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

### □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연지원

- 인지가능력이 형성되는 영유아부터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**장기 흡연자까지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** 제공
  - **모든 학생, 군인** 등에게 **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서비스** 실시('15.5월)
    - \* 학교(전체의 10% → 모든 학교), 군인(흡연장병의 8% → 전체 흡연장병)

- **병의원 금연치료** 등록 환자에 대하여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보조제(패치, 껌, 약제) 투약 비용 지원('15.2월)

### □ 건강생활 실천 지원

- **바른 식생활, 운동,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민관합동 「범국민 건강생활실천 운동본부」** 구성·운영('15.4월)
  - ※ 학교·아파트·경로당 등 건강사업 확대, 건강위험요인 분야별 가이드라인 개발, 생애주기별 건강교육자료 개발 및 건강정보제공, 국민캠페인 실시 등
- 담뱃갑에 **흡연 경고그림 도입**, 당구장 등 **금연구역 확대**, 공공장소 **음주 및 주류판매 금지 등 건강위험요인 관리 강화**('15.10월)
- **근로자건강센터** 확충('14, 15→ '15, 20개소)을 통한 건강관리체계 개선

### □ 만성질환 예방·관리 강화

- **여성 및 고위험군 암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암 검진 확대**
  - ※ 간암 고위험군(B형·C형 간염보균자 등) 검진주기단축(1년→6개월),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(의료급여 수급권자 30→20세)
- 건강검진 실시 후 **고혈압·비만 등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에게 건강상담 실시 및 만성질환 치료와 연계 강화** ('14. 100만명 → '15. 110만명)
- **동네의원에서 고혈압·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건강상담·교육 등 건강관리 강화**

### □ 신종 감염병 예방

-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**국제공조 강화**(글로벌 보건안보구상 서울회의, '15.9월)
- 고위험병원체 실험실(BL4) 가동('15.11월) 등 신종감염병 대응기반 강화
  - ※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통해 고도격리병상·BL4실험실 등 시설구축('15년 설계시작)

### [3] 보건의료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

#### □ 해외환자 유치 확대 (부가가치 1.8조원, 일자리 3.3만개 창출)

- ※ 경증환자는 미용·성형분야 “K-뷰티”로, 중증환자는 “프리미엄 토탈 케어”로 **브랜드화**
- 해외환자 사전·사후 관리 지원센터(PPCC : Pre-Post Care Center) 설치(‘15.6월), (가칭) **국제환자지원센터** 설립 계획(‘15.9월) 등 전주기 서비스 기반 마련
  - ※ PPCC 설치예정 지역 : UAE 두바이, 사우디 리야드 및 젓다, 카타르 도하
  - ※ 중등 국비 환자(중증환자) 등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(‘15.6월)
- 불법 브로커 단속, 진료수가와 수수료 적정화 등 **유치시장 건전화 방안 마련**(‘15.2월)

#### □ 한국의료 패키지 글로벌 진출 (부가가치 2.5천억원, 일자리 5천개)

- ※ 해외환자유치 중심(inbound 1.0) → 병원수출 중심(outbound 2.0) → 고부가가치 ‘K-medi 패키지(global healthcare 3.0)’로 발전
- 의료기관 진출 중심에서 **계약, 의료장비, IT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진출**을 통해 연관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
  - ※ 병원시공·의료장비·IT시스템·관리운영·의료진연수 등 패키지진출 성공사례 창출(1개 이상)
  - 의료면허 인정 간소화 등 우리 **의료인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**
  - ※ 현지 수요파악, 진출 인력 공모, 면허인정 신속화, 임금 협상 등 지원
- **의료정보시스템(HIS), 보건의료 R&D** 등 국제적 경쟁력 있는 **한국형 의료시스템**을 모듈화하여 국가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수출
  - ※ 오만 건강보험제도 도입 컨설팅(50만불)
  - 외국 **의료진의 유료연수 확대**(사우디 → 카타르, UAE) 등을 통해 의료 멘토 국가로 도약 추진
- **글로벌 진출지원 정책펀드** 조성(4천억원, ‘15.10월), **공공기관형 진출 지원 전문기관** 육성, 국가별 진출전략 수립(‘15.3월) 통한 적극 지원
  - ※ 의료기관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**법정부협업체** 설치(‘15.2월)
- ‘**국제의료사업지원법**’ 입법 및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는 시행 준비

- 의료 세계화를 위한 **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사례 확산**(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자법인 등 설립) 및 설립 장애요인 제거

#### □ 보건산업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주기 지원 (수출 8.6조원)

- (R&D) **보건의료 R&D 전략회의**(‘14.10월~) 운영을 통한 투자 확대·다변화 추진, 통합 성과평가 등 **성과지향적 R&D 투자 강화**(‘15.3월)
  - 연구중심병원 투자 확대(100억→ 170억원) 및 성과평가(‘15.3월) 등 산-학-연-병 연구생태계 강화
- (제품화) 줄기세포 등 첨단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(‘15.7월)
  - R&D 결과물의 **기술사업화 지원체계 다양화 방안 마련**(‘15.6월)
    - ※ 예시) ‘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전담조직(TLO) 협의체’ 운영 및 전문가 파견 지원 확대, 해외기술시장 정보 DB 구축을 통한 특허분석 툴 개발 등
    - **첨단의료복합단지** 내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활용 및 임상시험 병원 유치 추진 등을 통해 **첨단제품 개발·사업화 지원**(10월)
      - ※ 첨복단지-보건산업진흥원 연계하여, 보건산업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(4월~)
- (글로벌 진출)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(2회),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의약품 인허가절차 간소화(에콰도르→페루 등) 등 **비관세장벽 극복 지원**
  - **계약산업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** 및 **글로벌임상시험혁신센터** 운영(‘15.6월)을 통한 세계화 지원

#### □ 보건산업의 중장기 발전기반 마련

- (인력양성) 국제간호사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(‘15.3월)하고, 잡포털 등 통합 시스템 구축(‘15.9월)으로 **전문인력 체계적 양성**
  - ※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**국책기관(첨단의료복합단지·질병관리본부·보건복지인력개발원·보건산업진흥원·국립보건연구원 등) 인프라** 등 활용한 보건산업 융합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마련
- (보건의료 빅데이터) 유전체(바이오뱅크), 임상자료 등의 연계·활용이 가능한 **빅데이터 개방형 활용기반 구현**, 맞춤형 서비스 개발 촉진
  - ※ 구축방안 연구(‘15.1월~10월)→ 서비스개발 및 시스템 구축(‘16년~) : 암 등 한국인 맞춤형 진단·치료법 개발, 만성질환예측관리서비스 등

### 3 노후생활 안정

성과지표	2014	2015	2016	2017
장기요양 대상자	노인의 6.4%	7.0%	7.2%	7.4%
보호되는 소외 독거노인	36만명	45만명	47.5만명	50만명
노인일자리 수	31만개	33.7만개	38.7만개	43.7만개
국민연금가입자 수 (납부예외 제외)	1,655만명	1,700만명	1,730만명	1,757만명

#### [1] 활기찬 노년

##### □ 노인 건강 지원

- 틀니·임플란트 지원대상자 확대('15.7월)
  - ※ 임플란트·틀니 : 보험적용 연령 75→70세로 확대, 대상자 263만→450만명
- 노인 독감(인플루엔자) 무료접종 동네 병의원에서도 지원('15.10월)
  - ※ 보건소 외 민간의료기관(약 1만개소 이상)까지 확대, 대상자 470만→540만명
-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인공 무릎관절 수술비(19백명, '15.7월) 지원
  - ※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대상, 본인부담금 약 50~100만원 지원

##### □ 치매예방 및 지원 강화

- (치매예방 실천) 중장년 대상 '치매예방수칙 3·3·3' 홍보 강화, 복지관, 요양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'치매예방운동법' 확산
  - ※ 경로당 노인복지관의 건강백세운동교실(3,500여개, 7.5만명) 및 자조모임(90→178개소) 확대
  - ※ 체육활동코치(노인 사회활동 참여자, 0.5만명) 등 활용 노인층 야외운동 강습 실시
- (요양서비스 전문화) '치매대응형 노인요양시설' 확대\*('15.하), 인지·의료 재활서비스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(약 1,700개→1,900개)
  - ※ 요양시설 내 치매 노인을 위한 별도공간을 확보한 시설로, 치매 노인의 정서적 안정, 신체·인지능력 저하를 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제공

- (가족의 간병부담 완화) '치매가족휴가제' 내실화 및 가족 상담 전문서비스\* 제공 등
  - ※ 건보공단 장기요양센터(227개소) 등을 중심으로 가족 상담·훈련(문제행동 대응 방법, 스트레스 해소법 등) 서비스 제공

##### □ 독거노인 돌봄 확대

- 민·관협력 강화를 통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추진
  - ※ (공공) 안부·안전확인서비스 : 31.1만→39.6만명, (민간) 기업결연·후원 : 4.9만→5.4만명
  - ⇒ 소외된 독거노인의 75% 보호 (36만→45만명)

#### [2] 노후소득 보장

##### □ 기초연금·국민연금을 통한 든든한 노후보장

- (기초연금)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원
  - 기초연금 탈락자가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재신청 없이도 수급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서 지원
  - ※ 수급자 수 : ('14) 433만명→('15) 464만명
- (국민연금) 기금 500조 시대에 걸맞은 관리·운용체계를 마련
  - 기금운용의 전문성·독립성·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 및 지속 가능성 제고
  - ※ 기금규모: ('88) 0.5조→('00) 50조→('15) 500조→('22) 1,000조→('43) 2,561조원

##### □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

-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(17만명→463만명)에 대해 추후납부 허용 및 분할납부 확대(최장 24개월→60개월)
  - ※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('15.2월)



- 구직급여 수급자(연 82만명) 중 신청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는 **실업크레딧** 도입('15.7월, 월 보험료 최대 약 5만원 지원)
- **저소득 근로자**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('15.1월, 월 보험료 최대 6.3만원 지원)
  - ※ ('14) 135만원 미만 근로자 138만명 → ('15) 140만원 미만 146만명 대상
- 시간제 근로자가 복수사업장 60시간 이상 근로시 **사업장 가입**으로 보험료 부담 경감(50% 경감, 21만명)

### **【3】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**

#### **□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 제공**

-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하고('14. 31만개→ '15. 33.7만개), 노인일자리 사업체계 개편
  - ※ (전국형) 취약노인 돌봄 등 정책적 필요분야  
(지역형) 표준프로그램(30개)을 제안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 선택  
(취·창업·경력유지형) 역량있는 노인 대상 민간분야 가교일자리 창출
- 구인·구직정보 포털 운영 및 취업교육센터 확충(4 → 6개소)

#### **□ 의미있는 사회활동 참여 확대**

- 지역사회 봉사형(복지시설 봉사, 문화행사 지원) 자원봉사클럽 지원 (1,700개, 5.4만명)
- 재능기부형 전문 자원봉사활동(금융 등 전문상담, 음악·스포츠 등 예술교육) 강화 (40개 프로그램, 800명)